
2023년도 반부패·청렴대책

2023. 4.



해양수산부

[감사관실]

2023년도 반부패·청렴대책 추진계획(요약)

□ 기본방향

- 3대 추진전략, 8개 추진과제(21개 세부 추진과제) 수립·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, 깨끗한 해양수산행정 구현

'23년 비전과 목표

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해양수산행정 구현

* 종합청렴도(청렴체감도 + 청렴노력도) "2등급(우수)" 달성

*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과제 위주 반부패시책 수립

□ 중점 추진사항

○ 반부패·청렴체계의 고도화

①고위직 주도 추진체계로 실행력 강화, ②민·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정·투명성 확보

○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

③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, ④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, ⑤반부패 법령·제도 이행력 제고

○ 반부패·청렴시책 성과 확산

⑥반부패 중점과제 추진, ⑦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, ⑧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

□ 향후계획

- '23년도 우리부 반부패·청렴대책 소속기관(22개) 시달, 소속기관별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·이행토록 조치



목 차



I.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 여건	1
II. 우리부 부패 취약분야 분석	2
III.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	3
IV. 중점 추진과제	4
1. 반부패·청렴 체계의 고도화	4
2.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	5
3. 반부패·청렴시책 성과 확산	7
V. 행정사항	8
[붙임] 연간 세부 추진일정	9

I.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 여건

□ 대외 환경

- 국제투명성기구(TI)가 '23.1월 발표한 국가청렴도(CPI)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
 -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과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로서, '국가청렴도 20위권' 진입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 필요

□ 우리부 정책 여건

- (외부청렴도) 각종 인·허가업무, 지도·단속업무가 다수 있어 재량권 일탈·남용 등 부패발생 개연성이 항시 상존
 - * 공유수면 점.사용 허가, 항만시설 사용허가, 항만공사 시행허가, 원산지표시, 불법어업 단속 등
- (내부청렴도) 연령대·직급이 낮을수록* 내부청렴도가 낮게 측정되며, 이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시각차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
 - * 20·30대, 8급 이하에서 내부청렴도(청렴한 직무수행, 공정한 권한행사)가 낮게 측정

□ 추진여건 분석

SWOT 분석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청렴노력도 2년 연속 우수등급 유지 등 청렴시책 추진 노하우 및 능력 보유▶ 기관장·고위직의 강한 청렴 의지 및 노력	강점	약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부패사건 발생, 부패경험 응답으로 청렴도 하락▶ 다양한 업무 형태에 따른 부패 사각지대 존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반부패·청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▶ 공공정책의 공정성·투명성 꾸준히 개선	기회	위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▶ 반부패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내부직원 피로도 누적

☞ 대·내외 환경과 청렴정책 추진여건을 반영하고, 우리부 특색에 맞는 반부패·청렴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「'23년도 반부패·청렴대책」 수립·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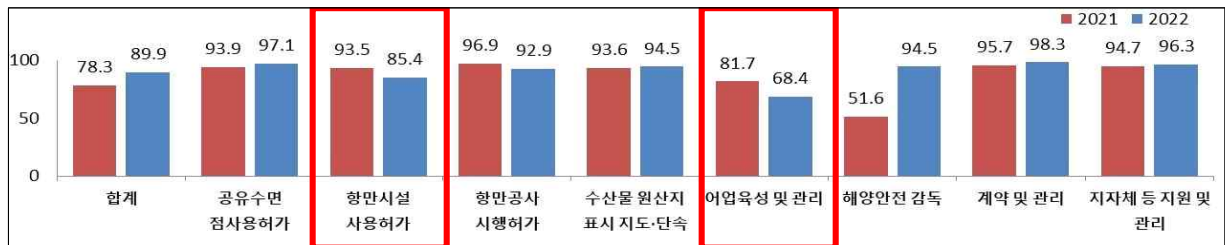
II. 우리부 부패 취약분야 분석

- (종합청렴도) 권익위 주관 '22년 종합청렴도는 3등급(84.1점)으로 청렴체감도는 보통(3등급, 83.2점), 청렴노력도는 우수(2등급, 91.1점)로 평가됨

* 청렴체감도(내·외부 설문조사, 60%) + 청렴노력도(실천노력도, 40%) - 부패실태 감점(10점 + 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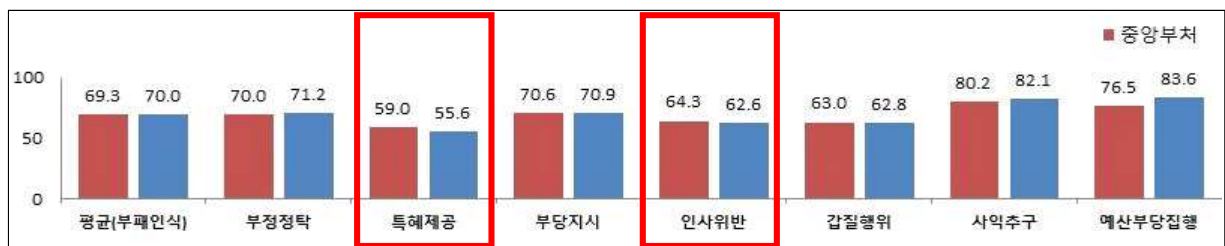
- 또한, '22년 자체청렴도(체감도)는 82.79점으로 외부청렴도는 82.35점, 내부청렴도는 84.14점으로 측정됨

- (외부청렴도) 중앙부처 평균보다 0.9점 낮은 89.9점으로 ①어업육성 및 관리, ②항만시설 사용허가 업무에서 부패경험 응답(각 1건)이 있었음



- 해당 업무에서 실제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는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, 민원인이 느끼기에 다소 불만족스럽게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추정

- (내부청렴도) 중앙부처 평균보다 1.9점 높은 67.3점이며 ①특혜 제공, ②인사위반 분야에서 낮게 측정되었음



- 일부직원은 연고관계 등으로 내부직원간 특혜를 제공하거나, 인사업무 처리시 기준·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

- (외부청렴도) 부패경험 응답이 있었던 ①항만시설 사용허가, ②어업육성 및 관리분야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

- (내부청렴도) ①연고관계 등에 따른 특혜제공, ②인사기준의 자의적 적용이 낮게 평가됨에 따라 해당분야의 집중 개선 필요

Ⅲ.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

비 전

“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해양수산행정 구현”

2023년도 반부패·청렴대책 목표

종합청렴도(청렴 체감도+청렴 노력도) “2등급” 달성

추진전략(3개)

1. 반부패·청렴 체계의 고도화

- ① 고위직 주도 추진체계로 실행력 강화
- ②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정·투명성 확보

2.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

- 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
- ②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
- ③ 반부패 법령·제도 이행력 제고

3. 반부패·청렴시책 성과 확산

- ① 반부패 중점과제 추진
- ②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
- ③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

IV. 중점 추진과제

1. 반부패·청렴체계의 고도화

① 고위직 주도 추진체제로 실행력 강화

- (장관주재 회의체 운영) 우리부 청렴 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,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, 직원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구성·운영
 - ‘부패방지 중점 추진과제’ 선정 보고회 개최(2월)하고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하여 과제 추진 내실화 도모
- (서한문 발송) 장관 청렴실천 의지가 일선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장관 명의 청렴서한문을 소속직원에게 발송(2월)
- (현장 청렴 강조) 장·차관 정책현장 방문 행사, 정책협의체 등 개최시 우리부 청렴 실천의지 표명 및 협조 당부(연중)

②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정·투명성 확보

- (청렴옴부즈만 운영) 외부시각으로 우리부 부패요인을 모니터링 하고, 제도개선, 감사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
 - 민간전문가(7인)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 권고사항 적극 수용 및 이행 조치 / 옴부즈만 임기 만료(4.1)에 따른 신규(재)위촉 추진(3월)
 - 3개 기관(농식품부, 환경부, 우리부 등) 합동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, 상호 간 교류·협력 활동 강화(연 1회 이상)
- (산하기관 청렴행정 지원) 기관 내 부패 요인, 평가미흡 등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요청시 문제점 진단 및 맞춤형 대안 제시 등
 - 청렴도 우수기관 노하우 공유·확산 워크숍 개최(3월), 권익위 청렴도 평가미흡 기관(4개 기관)은 ‘청렴 컨설팅’ 필수추진(7월) 등

2.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

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

- (불이익 민원 관리 강화) 지도·단속 등 불이익 처분 민원인 불만 최소화
 - (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) 업무처리 표준안 마련, 업무 처리절차 안내 및 홍보 및 부패·불만신고센터 운영(연중)
 - (불법어업 지도·단속) 단속 사전예고제 확대(연근해→원양어선), 사건 처리 신호등* 운영, 고압적 언행 순화를 위한 용어순화 사례집 발간 등
 - * 지도·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의 민원인에게 단계별로 처리상황을 안내(SMS)
 - (민원만족도 제고) 단속·처분된 민원인 대상 제도운영·업무처리·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업무개선 추진(연중)
- (시스템 구축) 부패경험 우려가 있는 인·허가업무 통제시스템 구축
 - (항만시설 사용허가) 각 지방청(11) 업무처리 방식 통일*, 사용료 부과·감면 및 허가시설별 사용 목적 위반여부 점검 의무화, 대면접촉 최소화 등으로 부정·비리 및 특혜차단
 - * 각 지방청의 자체실정에 맞게 업·단체 청렴워크숍(간담회), 청렴이행 서약서 징구, 허가서에 청렴 신고센터 안내문 기재, '2인 1조 출장제도' 운용 등
 - (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) 업무처리 실태 점검(반기), 역량 강화 순회 교육(2~4월), 업무담당자(지방청)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* 추진 등
 - *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(3월) → 지방청 담당자 애로사항 파악(4월) →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(5월) → 법령 등 개정 추진(8월)
- (공정한 조직문화 조성) 세대 간 인식 차이 개선, 상하 간 소통 강화, 갑질 피해사례 조사·공개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
 - (으뜸·후크선장 선정) 일반직원(5급 이하)을 대상으로 간부급 직원의 도덕·책임성, 소통 능력 등을 조사·공표(5월)하여 바람직한 상사像 정립
 - (갑질 인식도·피해사례 조사·교육) 갑질 관련 쏘 직원 인식도 및 피해사례 조사·공개(연 2회), '직원 교육(2회)', 부당사례 엄중 징계 등
 - * (실태점검 강화) 소속기관(22개) 갑질 예방교육 실시여부 점검(연 2회)

- (조직내부 취약요인 통제·관리) 우리부 업무·조직특성을 고려 취약분야와 권익위·자체설문조사 부패요소에 대한 내부통제·관리
- (학연·지연 등의 부패요인 점검) 특정학교 및 특정지역 출신 등에 따른 부패 연결고리가 없는지 집중점검하고, 소통강화 추진 등
- (인사기준 공정성 강화) 승진·전보 등 인사는 불만요인이 상존하나, 인사 사전예고제, 기준·절차의 공정·투명성 강화로 신뢰도 제고

②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

- (고위급 교육) 우리부(본부·소속기관)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「청렴 리더십 교육」을 실시하여 고위직 청렴의식 강화(5월, 8월)
 - * 실시간 화상교육(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) / 1시간
- (전 직원 교육) 반부패·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법적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 추진
 - (기관방문 틈새교육) 전문강사가 직접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실정·특성에 맞게 청탁금지법, 행동강령 등 교육(인재개발원 협업)
 - * 최근 5년 이내 부패발생(11개), 부패경험 응답(2개) 기관에 대해 맞춤교육 실시
 - (온라인 자가학습) 청렴퀴즈, 청렴카툰 등 외부망(모바일 가능)을 통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(Clean Ocean) 콘텐츠 상시 운영(6~9월)

③ 반부패 법령·제도 이행력 제고

- (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) 부패행위 발생 취약시기(연말·연시, 명절 등) 공직기강 점검(금품·향응·편의 수수, 부당 사익추구 등) 실시(5회 이상)
- (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강화)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'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' 우리부 자체규정*에 반영
 - * 「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개정 추진 : 의견조회(4월 말) → 개정(5월 말)

3. 반부패·청렴시책 성과 확산

① 반부패 중점과제 추진

- (자체 중점 추진과제) 실·국(소속기관)별로 도전성·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총 33건(본부 9, 소속 24) 발굴 추진(3월)
 - 「청렴길잡이단」실무검토, 「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기획단(차관주재)」도전·혁신성, 실행가능성 심의, 장관주재 보고회 개최 및 확정
- (비영리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) 보조금의 부당 집행 및 낭비요소를 점검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도모
 - 최근 3년간('20~'22)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자체 감사 실시(①지원단체 선정 적정성, ②회계처리 투명성, ③목적외 사용 등)

②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

- (외부 의견 수렴) 반부패·청렴대책 수립 시 자문기구인 「청렴음부즈만」 협의체 개최를 통해 추진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등 실시
- (청렴활동 피드백 강화) 「자체 청렴도 측정 및 청렴 컨설팅」을 통해 우리부 청렴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
 -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 결과 도출된 '청렴도 향상방안'을 우리부 및 산하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 - * ①지도·단속기관, ②본부 및 ①을 제외한 소속기관, ③산하 공공기관 / 총 3회
- (청렴소식지 발간) 반부패 관련 법령, 주요비위 처분사례, 행동강령 주요 상담사례 등을 전 직원에게 메일링* 서비스 제공(분기 1회)
 - * 온나라 메일로 발송 / '22년도 총 3회 16,458명에게 메일링 서비스 제공
- (청렴시책 효과성 분석) 그간 추진한 반부패 정책, 기관장 의지·노력, 청렴 교육 등에 대하여 내부구성원 설문을 통해 효과성 분석
 - * 자체 청렴도 측정 시 "청렴시책 효과성 분석" 설문도 병행하여 진행('23.5~6월)

③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

- (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) 민간부문 공정성·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·제도, 캠페인, 토론회, 공모전, 언론 홍보(SNS 등) 등 시행
- (민원인 대상 캠페인·홍보 강화) 수산공익직불제 조사원 "We청렴 海" 명찰·케이스 제작·보급, 국가어업지도선 고속단정 "청렴 깃발" 부착, 승선조사 후 "청렴 안내문자 & 해피콜" 실시 등

V. 행정 사항

□ 소속기관별 자체 「반부패·청렴 실천계획」 수립·추진

-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「2023년도 반부패·청렴 실천 계획」을 수립하고 감사관실 제출(5.30.까지)

□ 우리부 및 산하기관 자체청렴도 측정

- 우리부(본부 13 + 소속 22) 및 산하기관(12) 대상으로 외부고객과 내부직원에게 설문조사('23.5~6)를 실시하여 청렴수준을 진단

□ 소속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

- 소속기관(22개)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('23.11~12)하여, 우수기관은 인센티브(장관표창 6점, 포상금 500만원) 부여

□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이행사항 점검

-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반부패·청렴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정기·수시로 점검하는 등 이행상황 철저히 관리
- 또한, 권익위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반드시 기한 내 제출(별도 통보 예정)

추진과제	일정	주관부서	관련부서
1. 반부패·청렴체계의 고도화			
[1] 고위직 주도 추진체계로 실행력 강화			
1. 장관주재 회의체 운영	4회	감사관	쑤 부서(기관)
2. 장관 청렴서한문 발송	2월	감사관	쑤 부서(기관)
3. 현장 청렴 강조	연중	실·국, 소속기관	쑤 부서(기관)
[2]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정·투명성 확보			
1. 청렴옴부즈만 운영	연중	감사관	쑤 부서(기관)
2. 산하기관 청렴행정 지원	연중	감사관	산하 기관
2.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			
[1]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			
1. 인식 제고	연중	지도교섭과, 수품원, 어업관리단	-
2. 시스템 구축	연중	실·국, 지방청(11)	-
3.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	연중	운영지원과, 감사관	쑤 부서(기관)
4. 조직내부 취약요인 통제·관리	연중	운영지원과, 감사관	쑤 부서(기관)
[2]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			
1. 고위급 교육	5, 8월	인재개발원, 감사관	쑤 부서(기관)
2. 전 직원 교육	연중	감사관, 인재개발원	쑤 부서(기관)
[3] 반부패 법령·제도 이행력 제고			
1.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	연중	감사관, 소속기관	쑤 부서(기관)
2.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강화	연중	운영지원과	쑤 부서(기관)
3. 반부패·청렴시책 성과 확산			
[1] 반부패 중점과제 추진			
1. 자체 중점 추진과제	연중	실·국, 소속기관	쑤 부서(기관)
2. 비영리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	연중	감사관	산하 보조금단체
[2]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			
1. 외부 의견 수렴	연중	감사관	쑤 부서(기관)
2. 청렴활동 피드백 강화	4~6, 연중	감사관	쑤 부서(기관)
3. 청렴소식지 발간	상·하반기	감사관	쑤 부서(기관)
4. 청렴시책 효과성 분석	7월	감사관	쑤 부서(기관)
[3]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			
1.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	연중	실·국, 소속기관	쑤부서(기관)
2. 민원인 대상 캠페인·홍보 강화	연중	감사관	쑤부서(기관)